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2026. 1. 28.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 기후위기 영향 확산 ...

기후대응 실패 시



국가 성장률
매년 **0.3%p** 하락



2100년 GDP
21% 감소 전망

*출처 : '24. 한국은행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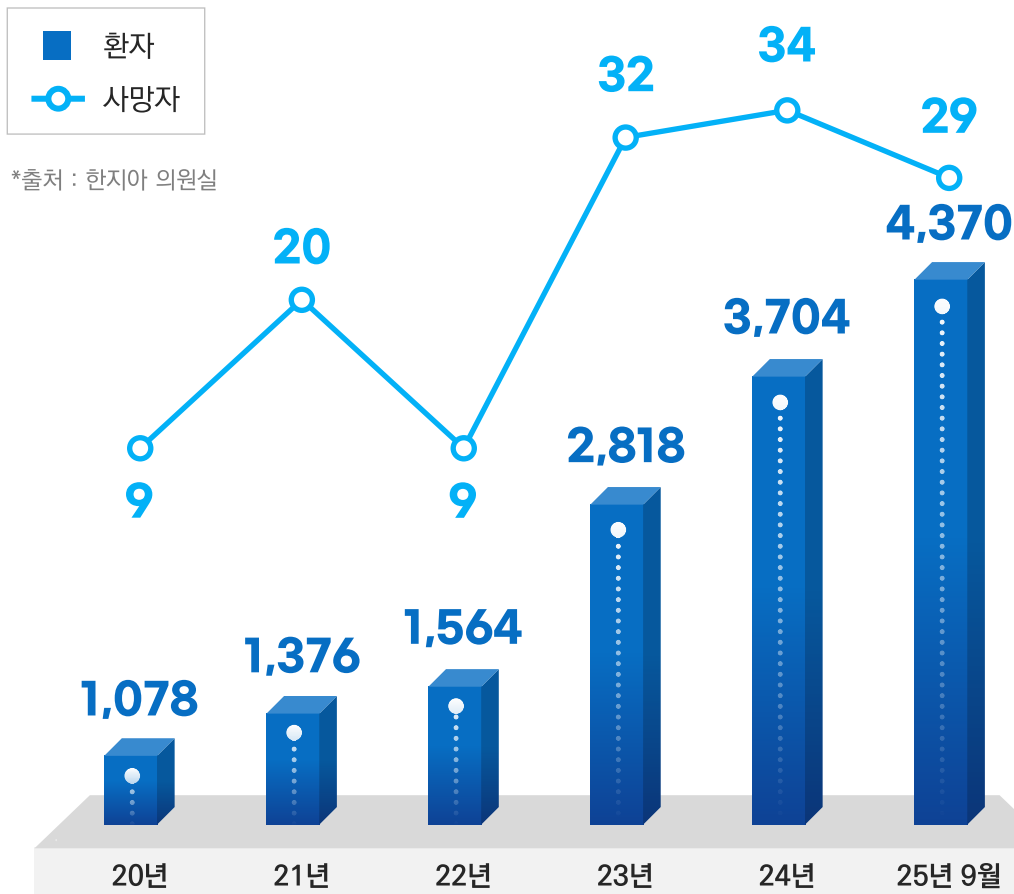


환자 최근 5년간
4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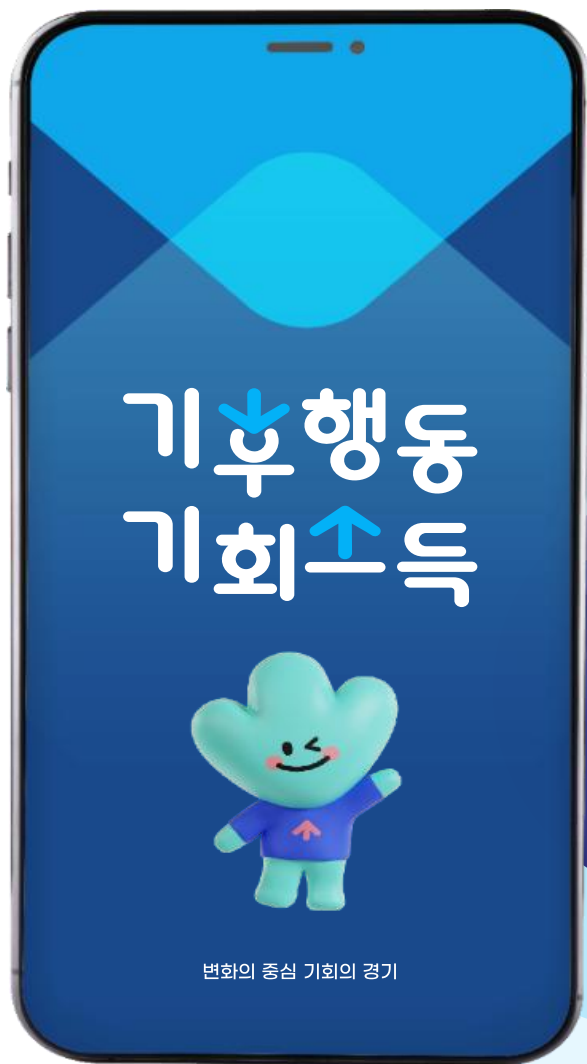


사망자
3.2배 증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응급실 방문 온열질환 신고 및 사망자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



2026년 사업 2026.01.05 시행 (2026년 예산 350억원)

인식제고	에너지	교통	자원순환
소통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자전거 이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생물 다양성 탐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대중교통 이용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기후퀴즈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걷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환경교육 참여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줍깅/플로깅			
기후도민인증			

*각 실천활동마다 일 최대 적립한도가 상이합니다. **실천활동에 대한 기준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후정책에 도민 참여가 왜 필요한가 ”

기후정책의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 확보



국민을 정책의 수용자가 아닌
형성과 실행의 주체로 전환





추진배경

- ▶ 한정된 계층 의견수렴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 한계
- ▶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정책 수립·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인프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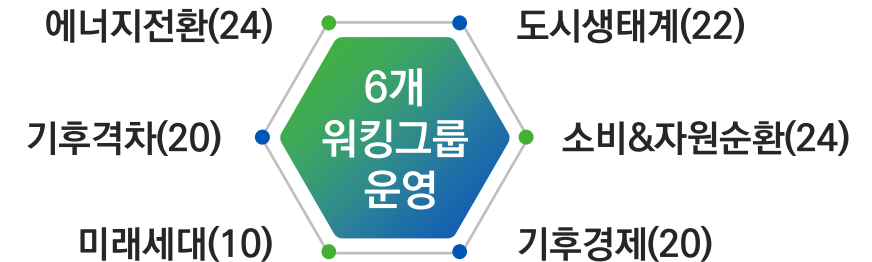
추진근거

- ▶ 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의 2
- ▶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의 법제화 사례로 전국 최초

... 사업개요 ...

구성원	120명 (임기 '25.6.30. ~ '25.12.15.)
모집방법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신청 + RDD 방식 (나이·성별·학력·직업·거주지역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

운영방식



추진 프로세스

01

모집

02

무작위 선정

03

학습

04

숙의토론

05

권고안 도출

06

정책권고문 전달
(→ 도지사)

01

출범식

도민 120명 위촉



02

제1차 총회

전문가 발제



브레인라이팅

06

성과공유회

정책 권고문, 미래세대 비전문
도지사 전달

03

제2차 총회

전문가
자문·질의스캅퍼
토론

05

제3차 총회

그룹별
발표전체
토론선호 정책
투표

04

현장학습

부천
자원순환센터여주 구양리
햇빛발전소 마을

자문지원반 회의



중소기업, 농산어촌, 모든 노년 세대의
상기 후교육 활성화 등 4가지 범
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다.

임병준(시흥에코센터) 7:35 PM

인 도민총회에서 제시된 정책 의견은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는가요?

이태영 7:37 PM

이 답변 감사합니다.

조삼도 7:39 PM

조 얼마전 재활용 최종 집하업체 화재 하나로 수거에 영향받는 문제 해결책이 뭔가요?

지역별 기후격차 자료가 있나요?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7:39 PM

경 총회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 부서 등의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화 혹은 입법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병준(시흥에코센터) 7:40 PM

임 답변 감사합니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7:41 PM

경 31개 시군 기후격차 자료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으며, 기후도민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전학습

서면 자문

2025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절약, 생산하자

제안자	강승하	위임그림	여지친한
제안배경 이유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전기를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으므로 제안		
제안내용	가정이나 체육시설, 놀이방 등 운동구에 발전시설을 연결하여 전기를 생산할 때 가정이나 공공건물로 활용하는 방안		
기대효과	건강과 지적 자재 생산으로 전기가 절감, 친환경 에너지 생산, 누구나 참여 가능		
분석된 의견	신체 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연계한 친환경 캠페인 방안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활동 연계 방안 정책적 필요성 ● 운동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실제 전력 생산량은 제한적이지만, 건강·환경교육·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회적 효과가 큼. ● 제안 4대(‘에너지 개발 안’)와 연계하면 ‘경기도형 해법-참여형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함. 구체적 보완 발전 방향		
전문가 자문			

1. 체험형 에너지 생산 프로그램 패키지화

- 도민이 운동기구(자전거·런닝머신·압전등기 등)를 통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 전력을 로비, 조명, 전자책시판, 충전스테이션 등에 활용
- 건강 + 환경 + 참여형 교육이라는 **3중 효과**를 목표로 프로그램화하는 방안 고려

2. 공동체 거점 중심 도입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피트니스센터, 공공체육시설, 학교 등에 우선 설치
-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거점을 통해 자연스러운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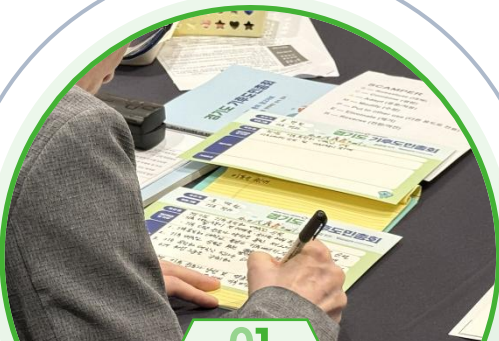
3. 인센티브 지급도 연계 가능

- 운동량에 따른 에너지 생산 기록을 가중치동기화소득 지급, 가호공인(제안 2·3·8)과 연동 →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계 가능

2025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녹지 보전과 녹지비율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제안자	김희룡, 원동빈	워킹그룹	도시생태계
제안 배경 및 이유	도시개발 사업 시 일정 비용을 초과한 녹지 비용을 가진 건축물에서 대한 규제 완화, 기존 산림 및 녹지를 보존한 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발사업 후 녹지 보존 및 녹지 비용 확대와 토인도		
제안 내용	1. 건축면적 대비 녹지화 비율 100~300% 이상 고녹지 건축물에 대한 종상향, 용적률 완화를 기업 이익을 유도하여 초고녹지 건축물 유도 2. 기존 녹지를 보존하거나 녹지비율 100% 초과 등 녹지보존 설계를 하면 조상 조식 십자 비용 일부를 보존하게 해주는 정책 3. 택지 개발 공공공정 등 대공공정 조성 시 녹지비를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기대 효과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인데 녹지의 보존과 녹지비율 확대와 시 인센티브를 준다면 많은 아이디어가 포함된 것이 아닐까 싶은 것으로 나오게 같습니다.		

분석팀 의견	공공공지 제도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공익과 사익의 이익 균형을 맞춘 정책들 통해 녹지 확대와 도심 녹지화 지원 방안
전문가 자문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시행 중으로 녹지 미흡손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음. 단, 녹지화비용을 넘어서 총상향을 해주거나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고층 건물에 도입될 경우 해당 토지에 세워진 건물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은 늘어날 수 있음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므로). 하지만 그만큼 제로에너지건물로 고효율건물을 건축한다면 상계가 없을 수 있음. 이러한 부분들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통해 검토될 수 있음 (기후변화영향평가는 2022년 9월부터 대규모 사업 대상 시행 중, 10개 분야는 △주택·개발,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지하 개발, △수자원 개발, △공항 건설, △관광 시설, △문화 시설 및 관광, △도로 건설, △농림수산, △농업 시설, △에너지 시설 등 11개 분야에 걸쳐 있음. 이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서 개발사업 한테만, 제2차 내용은 소규모 개발이나 건물까지 포함됨. 건축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 조의 상향율을 개정하는 것이 고민되어야 할 것임



01

발굴



95건

정책 발굴

(미래세대 비전문 포함)

정책 보완



02

정리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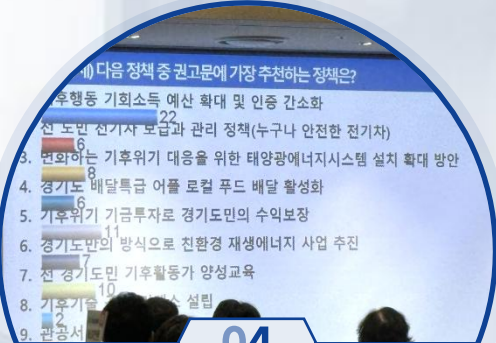
압축



53건

정책 선정

총 20건

정책권고문
도출

04

투표



정책적 성과

생활 밀착·체감형
기후정책 도출



제도적 성과

전국 최초
숙의공론 기구 법제화



참여적 성과

도민 참여로
정책 수용성·신뢰도 강화

참여 전후 인식 조사 결과

기후도민총회 참여 전·후 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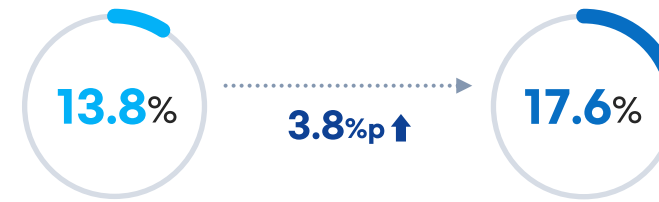
기후정책 수립 및 입법과정 이해도



기후정책 체감도



기후정책 탐색 빈도 | 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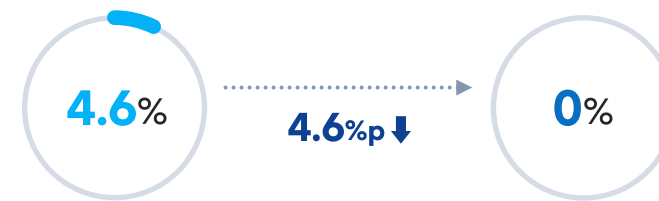
기후위기 관심도



기후정책 효과성



기후정책 탐색 빈도 | 찾아보지 않는다



참여 동력의
구조적 한계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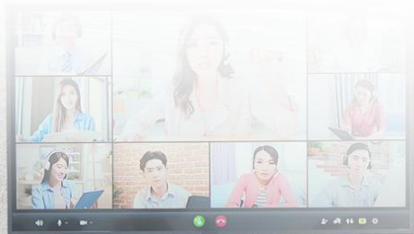
중앙 정책 · 입법
연계 한계



지역·권역별 운영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등
유연한 참여 구조 마련

중앙정부, 국회와
연계 가능한
협의 채널 마련

**개선
방안**



정책 이행·환류 체계 운영



도민 제안 **20**건 정책권고문 이행 점검

도민 소통공간 구축,
국내 지방정부·국제기구 연대 기반 마련



기후시민의회 확산 및 역량 강화

“ 정책 속의-실천-확산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기후거버넌스 체계 구축 ”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속의



출범 18개월 만에
176만명 가입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역기반 탄소중립 거버넌스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취약계층 대상 탄소중립 활동 참여 지원



기후봉사단 기봉이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 형성

